

생애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행태 영향요인 연구

- 추가출산계획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Women's Fertility Behavior Depending on Patterns of Life Course with Family Role and Economic Activity

- Focusing on the Additional Fertility Plan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김현정*

Dept. of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

Doctoral Course : Kim, Hyun-Jeong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affecting women's fertility behavior (additional fertility plan)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of 2007. Patterns of married women's life courses are divided into five groups depending on family role and economic activity : family-centered (no work experience) type, latent M type, M type,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and first job entry type. This study performs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the ke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ive distinctive patterns show the different composition : family-centered type (4.5%), latent M type (69.6%), M type (10.4%),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7.4%), and first job entry type (8.1%). Seco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usband characteristics, and value characteristic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additional fertility behavior ; however, institutional character is not significant. Fin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additional fertility plans vary in different patterns of life cours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주요어(Key Words) : 저출산(low fertility), 생애유형(patterns of life course), 출산행태(fertility behavior), 추가출산계획(additional fertility plan)

I. 서론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노동시장, 국가재정, 산업구조 등 다양한 측면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대응하는 일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

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1.17명으로 추락한 이후 2010년까지 1.22명을 유지하고 있어서 초저출산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1.3명 혹은 1.4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1.6명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McDonald(2005)의 가설(정성호, 2009 재인용)과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이론의 부재를 '저출산 올가미 가설(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로 피력한 Lutz(2006)의 주장을 빌리자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현정 (E-mail: dasom1012@naver.com)

면 현재의 저출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실은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이삼식, 2006)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반해 성분업적 역할이 지속되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저출산을 가속화시켰다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묵과할 수 없는 지적이다.

특히, 출산력의 영향요인으로서 학력 수준 차이에 따른 효과는 성별과 무관하게 생활양식을 변화시켰으며 여성에게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와 역할 증대, 양성평등의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핵심적인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을 야기한 핵심적인 요인이다.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추구는 이제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여성에게는 보편적인 욕구로 자리 잡고 있어서 여성이 경험하는 직장가정에서의 역할 상의 긴장관계는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Atoh(1998)는 현대 사회의 주된 저출산의 원인으로 출산 및 양육의 기회비용과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을 제안하였다(이삼식 등, 2008 재인용). 많은 여성들은 전일제로 일하며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구한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에 따라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게 되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 성장 후 재취업을 원하지만, 욕구에 맞는 직업이나 소득활동으로의 진입장벽은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가 된다. 이러한 순환적 관계는 여성의 인적 자본 활용과 출산력 제고의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정책 실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여성의 경제활동과 연계하여 논의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제도적 측면의 보완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저출산 현상은 여러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것이지만 정책 및 제도적 개입에 있어서 가족 내 여성의 역할 제고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이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정책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여성에 대한 과도한 역할 요구라는 또 다른 비판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왔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상태이다(공선희 등,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근로여성 중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 휴직제도 등 각종 휴직제도는 약 30% 내외, 직장 내 보육 시설은 7.7%, 보육비 지원은 10.7%, 시차출퇴근제와 교대근로제는 각각 5.1%와 6.8%만이 실제로 이용 가능하여(신윤정 등, 2008)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여성에게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끝으로 여러 연구들이 출산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김두섭, 2008; 김정석, 2007; 신윤정, 2008; 신인철, 2009; 이삼식, 2006; 황나미, 2007)은 여성의 경제활동유형을 간과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공선영, 2006; 박수미, 2008; 정혜은·진미정, 2008)에서 경제활동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나 취업여부를 고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유형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적하고 세부 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성의 출산행태(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다차원적 요인을 양적 방법론으로 검증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안에 관한 진단과 대응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임기 기혼여성의 생애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생애경제활동 유형별로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여성의 생애경제활동유형과 출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을 기점으로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70%를 웃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80년대의 40%대에 비해 상당히 상승한 것이다(주재선·이채정, 2008). 그러나 여성들의 취업동태를 살펴보면 잦은 경력단절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가족주기의 생애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은기수·박수미, 2002). 다시 말해서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생애사건에 따라 여성에게 부여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가사일과 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증가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욕구와 갈등 관계를 야기하여 기혼여성에게는 양립하기 어려운 '선택'의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여성이 경제영역으로 편입되는 속도에 비해 남성이 가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으며(박기남, 2009), 결혼,

출산 등이 자연스런 생애과정으로 인식되던 여성의 가치관이 선택적 사항으로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만혼화와 저출산 추세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Beets(1997)는 이점에 주목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비하여 남성의 가사에 대한 태도와 역할이 변화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하였다(이삼식 외, 2008 재인용). 따라서 여성은 가사와 경제활동 양립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아이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가지며 심지어는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박수미, 2008; 이삼식, 2006; 조병구 등, 2007; 최숙희·김정우, 2005; 최은영, 2006)도 동일하게 지적하였으며 여성의 생애경제활동유형과 저출산의 순환성과 연쇄성을 방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성의 생애경제활동은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몇몇의 연구가 있다. 먼저 여성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씨퀀스 분석을 시도한 은기수와 박수미(2002)는 ‘학교 졸업’, ‘실업’, ‘취업’, ‘결혼’의 네 가지 생애사건을 통해서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주부형)’, ‘결혼후퇴장형’으로 구분하였다.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연속취업형이 32.5%, 한 번도 취업을 한 적이 없는 비경제활동형이 31.7%로 결혼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결혼후퇴장형(23.3%)과 경력단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불연속취업형(12.5%)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4가지 유형은 본인 및 부모의 인적자본에서 차이를 보여서 여성 내부의 생애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이질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그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한 황수경(2003)의 연구가 있는데 여성의 생애유형을 소득과 직종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높은 인적자본으로 숙련된 경력을 통해 고숙련-고임금 직종에 속한 유형으로 전문직종의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숙련된 경력에 대한 수익률은 다소 낮지만 고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종에 속하는 유형으로 경력단절 이후에도 취업이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경력단절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한 비경제활동 유형이다. 고숙련-고임금의 여성은 경력단절을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유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경력단절을 거치게 되면 고숙련-고임금이었던 하더라도 저숙련의 직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재편입될 가능성이 크며 저숙련-저임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노동시장에서 고숙련-고임금과 저숙련-저임금으로 양극화된 유형으로 나타나며 저숙련-저임금과 비경제활동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 경력단절의 핵심에 바로 결혼-임신-출산-양육의 연쇄적 생애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생애경제활동 유형화를 통해 M자형 생애유형의 강화현상과 그에 따른 만혼화를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피력한 박경숙과 김영혜(2003)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혼여성의 생애를 결혼과 출산기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여성(일·가족 중복형, 13.7%), 결혼 전에 일을 했으나 출산 및 육아기간 동안 일을 그만 두고 공백기를 거친 후 일자리로 돌아온 여성(M형, 18.6%), 결혼과 출산 직후 직장을 그만 둔 여성(잠재M형, 26.9%), 결혼 전에 일한 경험이 없지만 결혼 및 육아 후 일자리를 처음 가진 여성(양육 후 입직형, 23.5%), 전혀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17.3%)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주지할 사실은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잠재M형, M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육 후 입직형이나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며 90년대 이후 결혼한 여성의 경우 일·가족 중복형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여성의 연령층이 1985년 25~29세에서 2008년 30~34세로 이동(주재선·이체정, 2008)하는 현상을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만혼화 현상과 관련이 깊다. 즉, 잠재M형과 M형의 증가와 만혼화는 여성의 가족과 노동시장 내의 역할 상의 갈등과 긴장관계를 반영하며 이것이 저출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생애경제활동유형과 출산은 상호 연쇄적이며 순환적 관계의 속성을 보인다.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높아지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결혼-임신-출산-양육’의 일련의 생애 사건은 여성의 경력 단절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 경제활동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과연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가능하며 실제로 OECD의 다른 국가들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90년대 후반부터 정적 상관을 보이기도 한다(이재경 등, 2005).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서구와는 다르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을 분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생애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여성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대상인 여성이 가지는 속성의 다양성을 점검하여 정책 수립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행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내부의 이질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출산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물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성의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정책 제언의 유용한 접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기혼여성의 출산과 출산행태

출산행태와 출산력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저출산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여 제안한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김태현 등 2005; 이삼식 등, 2008; 공선희 등, 2008), 이들 연구에서는 정책적 환경의 변화와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정책적 환경으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억제정책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를 2.1명에 못 미치는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는 점과 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본격화 된 이후에도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변화는 결혼, 가족제도 및 가치관의 변화와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등으로 근래의 가족유형과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 환경의 변화가 야기되면서 출산행태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듭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가구소득 및 개인임금의 변화, 자녀양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의 상황이 야기되었다.

앞서 언급된 여러 요인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여성의 출산행태에 영향을 주는 보다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한 바 있다(공선희, 2006; 김두섭, 2008; 김정석, 2007; 박수미, 2008; 신윤정, 2008; 신인철, 2009; 이삼식, 2006; 정혜은·진미정, 2008; 황나미, 2007). 그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주목한 세 개의 연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공선희(200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기혼여성 집단이 희망자녀수가 낮으며 비취업 여성은 아들 유무와 남편의 종사상 지위가, 취업 여성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과 종사상의 지위 등이 희망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혼여성 중에서도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을 구분하여 희망자녀수에 영향을 주는 각기 다른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박수미(2008)의 연구에서 둘째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의 연령, 2세 미만의 자녀 유무, 남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며, 특히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출산을 서두르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출산 및 양육 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희망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둘째를 출산하지 않으려 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높을수록 추가출산에 긍정적이다. 한편 전업주부의 경우는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낳으려는 경향

이 있을 경우 추가출산계획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른 추가출산계획 역시 영향요인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를 분석하되 정책 변수와 문화가치관 변수를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한 정혜은·진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원 욕구가 클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둘째자녀 출산의도는 높아지며, 비취업 여성의 경우는 자녀양육비가 높을수록 둘째 출산의도가 낮으며 첫째가 여아인 경우, 정서적 자녀가치관과 도구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둘째 출산의도가 강해진다. 또,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둘째 출산의향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배우자 특성, 가치관 특성, 제도적 특성이 출산행태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요인들이 집단 간에 상이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경제활동형태를 유형화하여 출산행태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애경제활동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구성하여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된 함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출산행태 분석을 위해 추가출산계획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출산계획이 반드시 출산행위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행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미 이루어진 출산행위는 과거 행위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출산계획에 대한 분석은 현재를 통해 미래 행위를 전망하는 데 유의하기(김정석, 2007)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양적 분석을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의 2007년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성장과정, 학교생활, 경제활동, 결혼과 출산,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출산계획에 관한 연구대상의 연령기준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연령차에 따라 출산의식과 행위의 변이를 조정하기 위해 35세 정도로 연령을 제한한 연구(김정석, 2007)가 있는가 하면 가임기(15-49세)는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임기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보는 연구(김동식, 2008; 이삼식, 2006)도 있다. 연구자는 후자에 동의하며, 동시에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표 1>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주요 특성 비교

변수	구분	원표본(N=2,261)		분석표본(N=1,683)		t값 또는 χ^2
		N	%	N	%	
연령	평균	34.17세		34.24세		-0.562
학력	고졸이하	1,032	45.6%	717	42.6%	3.619*
	전문대졸	527	23.3%	413	24.5%	
	대졸이상	702	31.0%	553	32.9%	
남편연령	평균	36.81세		36.85세		-0.261
남편학력	고졸이하	815	36.1%	564	33.6%	7.041*
	전문대졸	446	19.8%	304	18.1%	
	대졸이상	994	44.1%	812	48.3%	
출산자녀수	평균	1.87명		1.87명		0.066
가구소득	평균	308만원		320만원		-1.557
자녀교육비	평균	32만원		33만원		-0.760

* p<.05

경제활동유형화에 연령 제한이 편향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에서 규정한 가임기(15-45세)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현재 배우자가 있으며 출산 경험이 있는 45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2,261명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생애 경제활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경험'과 '현재의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발생한 무응답, 응답거부, 결측으로 최종 연구대상은 1,683명이다.

분석표본의 표본 편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위해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집단 간 주요 특성을 비교하였으며(<표 1> 참조) 응답자와 배우자의 학력 분포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 이외에 다른 주요 변수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생애 경제활동 유형화

생애 경제활동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개인용 설문 중 결혼과 출산(첫째, 둘째) 당시의 일자리 경험을 묻는 세 개의 문항에서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사례를 1차적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경제활동여부와 첫 직장경험 및 이전직장 경험의 설문 내용을 통해 생애 경제활동을 가족중심형, 잠재M형, M형, 일가정양립형, 신규진입형으로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가족중심형은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지 않은 유형이며, 잠재M형은 결혼 전에는 일을 했으나, 결혼 이후 결혼, 출산(첫째, 둘째), 육아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으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M형은 결혼 전에는 일을 했으나, 결혼, 출산(첫째, 둘째), 육아로 일을 그만 둔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는 잠재M형과 유사하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유형이다. 일가정양립형은 결혼 전부터 일을 했고, 결혼, 출

산(첫째, 둘째), 육아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없으며 경력단절 없이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는 유형이다. 끝으로 신규진입형은 결혼 전에는 일을 한 적이 없고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도 않았으나 출산과 양육 후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유형이다.

3. 변수 측정과 분석

종속변수인 추가출산계획은 출산 유경험자의 자녀 추가출산계획 유무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경제적 특성, 배우자 특성, 가치관 특

성, 제도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표 2> 참조).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은 응답자 및 배우자의 연령, 학력, 출산자녀수, 가구소득, 자녀교육비 등이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총합으로 측정하였으며 자녀교육비는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드는 총비용을 의미한다. 둘째, 배우자 특성은 남편의 가사노동만족도와 남편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만족도는 부인이 평가한 남편의 가사노동만족도를 의미하며 '매우 불만족'에서부터 '매우 만족'까지 단일 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남편에 대한 인식은 남편과의 대화정도, 의견일치도, 부부생활만족, 애정 정도에 대한 부인의 평가로 4개 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본 연구에서 남편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6이다.

셋째, 가치관 특성은 가족 내 여성의 의사결정개입정도과 성역할 인식을 포함한다. 의사결정개입정도는 자녀교육문제, 응답 여성의 경제활동, 자산 및 지출, 여가생활 등 가정 내 주요 사항에 대한 부인의 의사결정 반영 정도에 대한 자가 평가로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영 정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677이다.

<표 2> 주요변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변수측정
종속변수 (출산행태)	추가출산계획	출산 유경험자의 자녀 추가출산계획	유=0, 무=1
사회경제적 특성	연령, 남편연령	조사시점 연령	만 나이
	학력, 남편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고졸이하=0, 전문대졸=1, 대졸이상=2
	출산자녀수	출산한 자녀수	총수(명)
	가구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총합	총액(만원)
	자녀교육비	자녀교육에 지출되는 공교육 및 사교육비 총합	총액(만원)
배우자 특성	남편가사노동만족도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	총점(점), 5점 척도
	남편에 대한 인식	남편과의 대화정도, 의견일치도, 부부생활만족, 애정 정도에 대한 부인의 평가	평균(점), 4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 .836
가치관 특성	의사결정개입정도	자녀교육문제, 응답 여성의 경제활동, 자산 및 지출, 여가생활 등 가정 내 주요 사항에 대한 부인의 의사결정 반영 정도	평균(점), 3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 .677
	성역할 인식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 (문항: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인가?)	총점(점), 5점 척도
제도적 특성	모성보호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수당, 직장보육시설, 자녀학비보조, 보육비지원, 탄력근로 및 시차출퇴근제, 교대근로 중 이용가능한 제도의 수	개

성역할 인식은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의 정도가 강하다.

끝으로 제도적 특성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수당, 직장보육시설, 자녀학비보조, 보육비지원, 탄력근로 및 시차출퇴근제, 교대근로 등 8개의 직장 내 복리후생에 대한 본인의 혜택여부를 각각 측정하여 이용가능한 제도의 수를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의 기술통계분석과 t검증, f검증 등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생애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추가출산계획의 영향요인 검증을 위해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생애경제활동유형에 따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 경우(74.1%)가 경제활동인 경우(25.9%)보다 상당히 많으며 유형별로는 잠재M형이 6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일가정양립형은 7.4%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많은 기혼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으며(잠재M형)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거나(일가정양립형), 재진

입(M형)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이고 신규진입형과 잠재M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으며, 학력은 전체에서는 고졸이하의 분포가 높으나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 참여 여성에 비해 대졸이상의 학력분포가 높다. 특히, 신규진입형의 경우 대졸이상이 61%에 달한다. 한편, 남편의 학력 역시 신규진입형에서 대졸이상이 70.6%로 나타나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출산한 자녀의 수는 평균 1.87명으로 인구대체율 2.1%에는 다소 못 미치며 추가출산계획에 대해서 77.5%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여서 현재 우리의 저출산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은 평균 319만원 이상이며 자녀교육비는 평균 32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소득과 자녀교육비 모두 경제활동참여 여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신규진입형이, 자녀교육비는 일가정양립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의 특성 중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2.86점/5점, 남편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1.92점/4점으로 보통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가사노동만족도와 남편에 대한 인식 모두 가족중심형과 M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가치관 특성 중 의사결정개입정도는 2.37점/3점이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의사결정개입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일가정양립형에 속하는 여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된 성역할 인식은 전체 평균 2.48점/4점이며 경

<표 3> 생애경제활동유형별 특성

단위: 명, %

변수명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전체	F값 또는 χ^2	
			가족 중심형	잠재M형	M형	일가정 양립형	신규 진입형			
사례수			75명 (4.5%)	1,172명 (69.6%)	175명 (10.4%)	125명 (7.4%)	136명 (8.1%)	1,683명 (100%)	-	
종속변수	추가출산계획	유	23.1%	22.7%	14.8%	23.0%	30.9%	22.5%	10.490*	
		무	76.9%	77.3%	85.2%	77.0%	69.1%	77.5%		
사회 경제적 특성	연령(세)		34.7	33.9	35.6	35.1	33.6	34.2	9.718***	
	학력	고졸이하	62.7%	44.2%	46.9%	36.8%	17.6%	42.6%	81.001***	
		전문대졸	24.0%	26.0%	18.3%	23.2%	21.3%	24.5%		
		대졸이상	13.3%	29.8%	34.9%	40.0%	61.0%	32.9%		
	남편연령(세)		37.2	36.6	38.25	37.0	36.0	36.8	6.422***	
	남편학력	고졸이하	45.9%	33.3%	41.4%	35.2%	17.6%	33.6%	43.290***	
		전문대졸	23.0%	18.9%	18.4%	14.4%	11.8%	18.1%		
		대졸이상	31.1%	47.8%	40.2%	50.4%	70.6%	48.3%		
	출산자녀수(명)		1.85	1.89	1.92	1.80	1.71	1.87	2.640*	
	가구소득(만원)		226.82	298.96	357.79	405.28	428.74	319.92	16.806***	
자녀교육비(만원)		23.04	30.61	43.81	42.24	32.69	32.68	9.610***		
배우자 특성	남편가사노동만족도(점)		3.14	2.84	3.04	2.78	2.68	2.86	3.646**	
	남편에 대한 인식(점)		2.04	1.91	2.01	1.89	1.86	1.92	2.813*	
가치관 특성	의사결정개입정도(점)		2.36	2.35	2.44	2.47	2.39	2.37	5.181***	
	성역할 인식(점)		2.54	2.50	2.43	2.35	2.46	2.48	1.335	
제도적 특성	모성보호 제도	개수				0.4	1.36	2.5	1.3	55.223***
		유				18.3%	41.6%	68.4%	10.5%	
		무				81.7%	58.4%	31.6%	89.5%	

* p<.05, ** p<.01, *** p<.001

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동의를 표현하였고 일가정양립형 여성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끝으로 제도적 특성은 직장에서 제공되는 모성보호제도를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중심형과 잠재M형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성보호 관련 제도는 평균 하나 이상의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89.5%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공선희 등, 2008; 신윤정 등, 200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직장에서만 양육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각종 모성보호제도를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장은 기혼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정착이 미흡한 상태여서 직장의 제도적 환경에 있어서의 편차가 큼을 시사한다.

2. 생애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추가출산계획 영향요인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특성은 생애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집단 간 상이한 특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혼여성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 전체와 생애경제활동 5개 유형을 각각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는 Chi-square값이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먼저 전체 연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기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p<.001), 남편연령이 낮을수록(p<.01), 출산자녀수가 작을수록(p<.001) 추가출산계획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남편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대졸이상에 비해 추가출산계획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05).

한편, 배우자의 특성 중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p<.05), 남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p<.001) 오히려 추가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박수미, 2008; 정혜은·진미정, 2008)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높을수록 추가출산에 긍정적인 경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지원은 여성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인식되어 출산의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가사노동만족도와 남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추가출산계획에는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인식한 낮은 수준의 가사노동만족도와 배우자에 대한 인식은 남편을 추가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

<표 4> 생애 경제활동 유형별 추가출산계획 영향요인

변수명		전체			비경제활동						
		B	SE	exp(b)	가족중심형			잠재M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사회 경제적 특성	연령	0.129***	0.036	1.137	0.257	0.376	1.293	0.147***	0.042	1.159	
	학력 ^{주)}	고졸이하	0.398	0.274	1.489	6.154	4.217	470.385	0.318	0.338	1.375
		전문대졸	0.185	0.260	1.203	5.208	3.312	182.646	0.107	0.319	1.113
	남편연령	남편학력 ^{주)}	0.087**	0.032	1.091	0.082	0.316	1.085	0.066	0.038	1.068
		고졸이하	-0.654*	0.270	0.520	-3.025	2.964	0.049	-0.645*	0.324	0.525
		전문대졸	-0.273	0.271	0.761	-3.735	2.933	0.024	-0.404	0.314	0.667
		출산자녀수	3.279***	0.204	26.536	5.881*	2.715	358.013	3.318***	0.251	27.615
	가구소득	0.000	0.000	1.000	-0.013	0.015	0.987	0.000	0.001	1.000	
	자녀교육비	0.005	0.004	1.005	0.021	0.050	1.021	0.000	0.006	1.000	
배우자 특성	남편가사노동만족도	0.197*	0.092	1.217	1.231	0.985	3.424	0.152*	0.110	1.165	
	남편에 대한 인식	0.692***	0.197	0.501	-0.703	2.245	2.021	0.530*	0.236	0.589	
가치관 특성	의사결정개입정도	0.403	0.259	1.496	3.950*	2.314	51.934	0.373	0.304	1.452	
	성역할 인식	-0.007	0.115	1.007	-1.111	1.334	3.036	-0.064	0.139	1.066	
	상수	-10.582***	1.482	0.000	-37.534*	17.731	0.000	-10.900***	1.741	0.000	
-2Log Likelihood		778.004			22.413			551.735			
Chi-square		788.584***(df=13)			43.823***(df=13)			543.708***(df=13)			
변수명		M형			경제활동 일가정양립형			신규진입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사회 경제적 특성	연령	-0.131	0.171	0.877	0.106	0.228	1.112	0.309*	0.215	1.362	
	학력 ^{주)}	고졸이하	0.351	1.125	1.420	1.238	1.686	3.448	-0.304	1.686	0.738
		전문대졸	-1.792	1.392	0.167	-0.868	1.191	0.420	3.376*	1.598	29.240
	남편연령	남편학력 ^{주)}	0.364	0.190	1.439	0.444*	0.217	1.558	-0.024	0.154	0.976
		고졸이하	0.560	1.237	1.750	-0.082	1.597	0.921	-1.185	1.428	0.306
		전문대졸	0.899	1.484	2.458	1.830	1.607	6.234	-0.345	1.710	0.708
		출산자녀수	4.555***	1.138	95.065	3.377**	1.161	29.288	4.310***	1.007	74.444
	가구소득	0.001	0.002	1.001	0.000	0.002	1.000	-0.005*	0.002	0.995	
	자녀교육비	0.009	0.018	1.009	0.008	0.018	1.008	0.013	0.017	1.013	
배우자 특성	남편가사노동만족도	1.139*	0.521	3.123	0.570	0.527	1.769	-0.004	0.450	0.996	
	남편에 대한 인식	1.908*	0.775	0.148	1.025	1.218	0.359	-0.226	0.944	1.253	
가치관 특성	의사결정개입정도	-1.951	1.452	0.142	0.914	1.463	2.493	-0.845	1.586	0.429	
	성역할 인식	1.182*	0.643	0.307	-0.533	0.708	1.704	0.015	0.511	0.985	
제도적 특성	모성보호제도	-0.180	0.501	0.836	0.069	0.265	1.071	-0.309	0.202	0.734	
	상수	-4.129	6.582	0.016	-25.392*	13.034	0.000	-10.931	9.154	0.000	
-2Log Likelihood		44.167			40.517			49.550			
Chi-square		83.697***(df=14)			79.791***(df=14)			97.972***(df=14)			

주) 기준점주: 대졸이상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표 4>을 살펴보면 남편가사노동만족도와 남편에 대한 인식 모두 전체 평균 점수가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생애 경제활동 유형별로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남편의 지원을 객관적 평가에 의해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부인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였으므로 측정방법의 상이성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출산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이며 이들이 이미 출산한 자녀수의 평균이 1.87명이어서 한 두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추가출산계획에는 남편의 가사노동만족도와 남편에 대한 인식은 다른 주요한 변수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다 추가적이고 면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증이 요구되리라 본다.

이어서 생애 경제활동 유형별로 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생애 경제활동 유형 중 비경제활동 유형에 속하는 가족중심형의 경우는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p < .05$), 의사결정 개입정도가 높을수록($p < .1$) 추가출산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잠재M형에서는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p < .001$), 출산자녀수가 작을수록($p < .001$) 추가출산계획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남편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대졸이상에 비해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고($p < .05$)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가 높을수록($p < .1$), 남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p < .001$) 추가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M형의 경우는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p < .001$), 남편가사노동만족도가 높을수록($p < .05$), 남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p < .05$) 추

가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가정양립형에서는 남편연령이 높을수록($p < .05$),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p < .01$) 추가출산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신규진입형의 경우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p < .1$), 출산자녀수가 적을수록($p < .001$), 가구소득이 많을수록($p < .05$), 여성의 학력이 전문대졸인 경우에 비해 대졸이상인 경우가 추가출산계획 가능성이 높았다($p < .05$).

앞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자녀출산계획은 자녀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부부의 연령과 이미 출산한 자녀수 등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가구소득과 자녀교육비는 출산행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공선영, 2006; 박수미, 2008) 기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신규진입형에서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추가출산계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균 출산자녀수는 1.87명으로 우리의 현재 출산율 1.22명을 초과한 수치여서 응답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 설문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평균 이상의 추가출산을 선택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끝으로 제도적 특성은 추가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에는 현재의 직장 내 모성보호제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둘째, 신윤정 등(2008)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 스스로 직장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기대나 인식이 낮아서 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직장의 복리후생 차원의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직접적 정책은 아닐 수 있지만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핵심적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반성적 숙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생애경제활동 유형별로 분석하여 진일보된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경제활동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으나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한 채 노동시장으로 재편입하지 못한 상태인 잠재M형의 비율이 69.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서 M형(10.4%), 일가정양립형(7.4%), 신규진입형(8.1%), 가족중심형(4.5%) 순

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을 경험하고 있으며(M형·잠재M형, 79.8%) 그 중 일부(M형, 10.4%)만이 노동시장으로 재편입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의 비율(일가정양립형, 7.4%)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 부여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사회경제적 특성, 배우자 특성, 가치관 특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제도적 특성은 그 영향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은 생애경제활동유형에 따른 5개의 세부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① 가족중심형은 출산자녀수와 의사결정개입정도가, ② 잠재M형은 연령, 남편학력, 출산자녀수, 남편가사노동만족도, 남편에 대한 인식이, ③ M형은 출산자녀수, 남편가사노동만족도, 남편에 대한 인식, 성역할 인식이, ④ 일가정양립형은 남편연령과 출산자녀수가, 끝으로 ⑤ 신규진입형은 연령, 학력, 출산자녀수, 가구소득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산자녀수는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요인들은 유형별로 매우 상이하다.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잠재M형과 M형에서는 남편가사노동만족도와 남편에 대한 인식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서 가정 내 배우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편, 경제활동 없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주력한 가족중심형에서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개입정도가 높을수록 추가출산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녀 출산과 양육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가정양립형은 일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만 영향을 받을 뿐 다른 요인들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일과 가정의 이중고를 개인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적응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적 특성을 보인다. 끝으로 신규진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으며 이들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추가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출산과 양육에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대신 개인적 삶을 보다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출산행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실행 및 평가에 있어서 생애경제활동 유형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연구가 필요함을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에 따른 장벽과 이후 출산계획 및 행태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물론이며 관련된 생애적 경험의 상이성이 기혼여성의 특성을 다양화 하는 결

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중심형의 의사결정개입정도, M형의 성역할 인식, 신규진입형의 가구소득과 여성의 학력은 전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의 분석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지만 세부 유형별 분석에서는 주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다양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반영할 때 효과적인 정책 대안의 수립이 가능하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특성을 간과하지 않은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배우자는 기혼여성에게 가정에서 긴밀한 상호교류를 통한 강력한 지원체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남편가사노동만족도와 남편에 대한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여 남편은 기혼여성에게 다중역할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지원체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수립과 실행에 있어 이 점을 유념하여 직장 및 사회적 측면에서 남성의 가정 내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기적인 캠페인, 교육,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유형을 고려하여 출산력 제고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이 되는 집단은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잠재M형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일가정양립정책은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앞으로도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하고 있지만 경력단절 여성에게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으며, 출산력 제고 정책에서 이점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민현주(2010)는 출산간격은 첫째 출산 이후 양육과 취업경험에 따른 적응 전략으로 보았다. 즉,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 없이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성들은 보다 쉽게 추가출산을 결정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제도적 특성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 특성의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현재 저출산 대응정책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직장 내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제활동 참가 여성의 89.5%가 전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직장에서 제공되는 모성보호제도의 일부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의무 이행 제도임에도 정책대상자인 가입기의 기혼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하지만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달과정에서의 행정 및 절차상의 미비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이제 사회적 문제임을 사회 전반에서 공감하고, 말뿐인 제도가 아닌 실천을 담보하는 변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하여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제도적 특성은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체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추가출산계획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출산자녀 수는 기혼여성 전체 및 생애경제활동의 세부 유형별로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합계출산율이 1.22명임을 고려할 때 출산을 미루거나 1명을 출산한 후 추가출산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염두에 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9.
- 공선희 · 손승영 · 안승덕(2008). 서울시 저출산 정책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동식(2008). Unfavorable Working Conditions and Fertility Intentions Among Working Mothers Living With At Least One Child. 제 1 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61-74.
- 김두섭(2008).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1(3), 1-26
-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태현 · 이삼식 · 김동희(2005). 저출산의 원인-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민현주(2010). 여성의 취업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http://www.kwdi.re.kr/seminarView.kw?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2&cmsCd=CM0007&pnum=4&num=0&ntNo=334>

박경숙·김영혜(2003).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 63-90.

박기남(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한국여성학*, **25(2)**, 37-71.

박수미(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신윤정(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신윤정·원종욱·이수형·박수미(2008).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인철(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 59-85.

은기수·박수미(2002). 여성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시퀀스(sequence) 분석. *한국인구학*, **25(2)**, 107-138.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2005). 저출산의 젠더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정성호(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조병구·조윤영·김정호(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KDI.

주재선·이채정(2008). 2008 한국의 성 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숙희·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최은영(2006). 한국저출산 원인의 깊은 구조 분석을 위한 시론: 국가의 성격 및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총*, **10(1)**, 25-41.

황나미(2007). 가임기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건강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7(2)**, 122-141.

황수경(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Lutz, W., V. Skirbekk and M. R. Testa(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 167~192.

접수일 : 2010년 08월 06일
 심사일 : 2010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05일